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교육단계

- ▶ 일시 : 2013년 7월 23일 14:00~16:00
- ▶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제목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교육단계

-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

■ 발표자: 최동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연구책임자: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교육단계**

-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

최 동 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최동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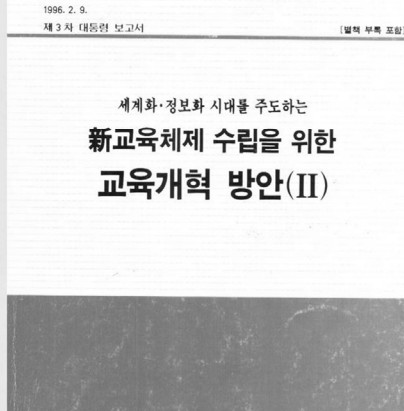
I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II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III 현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9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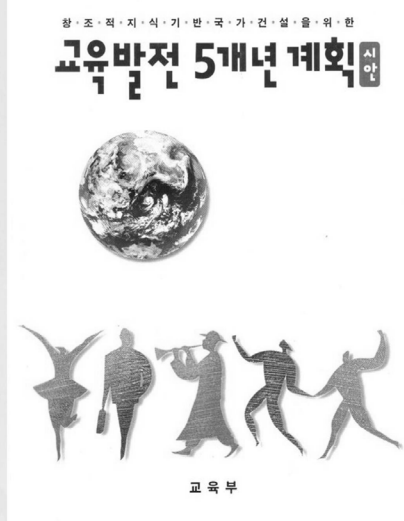


- 50 : 50 정책추진의 중단
- “특성화고등학교” 도입 및 확대
- 일반계/실업계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 → 통합형 고등학교의 토대
- 실업계고-고등교육기관 연계 운영
- 실업계고 교육과정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한 산업계 참여 확대
- 산업계 인사의 실업계고 교사 활용
- 실업계고 시설·설비의 현대화
- 실업계고 및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 직업교육 3법 입법 추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직업교육의 중심 축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기본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를 선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취업과 대학단계의 계속교육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개혁의 중점을 둔다.”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1999)



-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 추진
- 학생이 희망에 따라 일반계/실업계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고 도입 검토·추진
- 특성화고 및 (생활과학 관련) 특별 교육과정 설치 확대
- 직업기초 및 일반능력 중심 교육과정 강화
- 학교급별 직업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학교와 산업체간 협력 강화 : 산업인력 수급 전망에 기반을 둔 국가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관계부처 참여 하에 수립
-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 포함)
- 근로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학교 중도탈락자 포함)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 제1차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2000-2003)

職業教育訓練政策審議會案

21世紀 職業教育訓練의 發展 戰略

- 第1次 職業教育訓練基本計劃 -
(2000 ~ 2003)

1999. 12.

教育部 · 勞動部

○ 21세기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1999)

-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기반 구축
-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한 기술 전문교육의 강화
-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대상집단별 교육훈련 강화
- 경쟁적 직업교육훈련 시장의 육성
- 지방화와 국제훈련의 강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
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실업계고교육성대책(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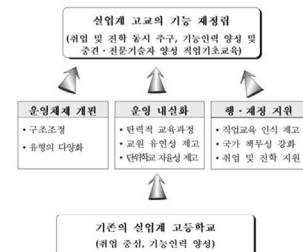
실업계고고 육성대책

고교 단계 직업교육기능의 약화에 따른 입학자
원 확보의 어려움 증가

- 경쟁력 없는 실업계고의 일반계고 전환 추진
- 일련의 과원교사 대책 수립 추진
- 교육과정 자율운영, 통합형 고시범운영, 학
교기업 도입 검토 등 추진
- 직업기초교육 강화 추진

III. 기본방향

- 기존 실업계고의 구조 조정과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 직업기초교육 강화, 단위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 조직의 연계를 대치하는 운영성을 제고하여 내실화·전문화를 기하는 한편,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구축 등 행·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 고졸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든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실업교육육성방안(2001)



(www.moe.go.kr)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1. 11 .

주요 정책추진 과제 :

- 2004년부터 대학입시에 실업고정원의 입학허용(동일계 입학정원의 3% 이내)
- 대학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 검토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재원 확대
- 실업고교생 학비지원 확대
- 실업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산학협동 참여업체에 범정부적인 지원대책 마련

자 례

- I. 추진배경 1
- II. 중점추진과제 2
1.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 문호 확대 2
 2. 실업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3
 3.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체제 마련 4
- III. 향후 추진계획 5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부처
2002. 7. 5.

제7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3호 안건 (참의안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평생직업능력개발제도 구축』 시행계획

제출위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 원 회
담 당	평생직업교육국장 조 성 중
심 의 자(자·과장)	평생학습정책과장 서 명 범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17일 확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중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의 정책과제로 제시된 『평생직업능력개발제도 구축』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I.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본목표

급변하는 직업환경에 저기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추진방향

- 평생학습을 위한 학교단계 직업교육 혁신
- 초·중등 단계의 기초 직업교육 강화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교육역량 강화
- 성인 직업교육기회의 획기적 확충
- 전문대·대학에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운영
 - 제직자 실직예방 및 실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강화
- 평생학습 환경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성인단계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 군부무단계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평생학습중심의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국가수준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마련되고(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2001년에 수립됨), 이에 따라 고교 단계 직업교육 정책은 거시적인 수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접근이 이루어짐. 특히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초교육 차원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기능이 명시됨.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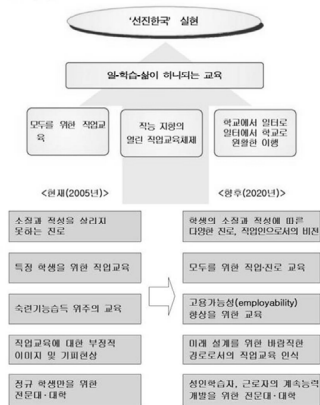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5. 5. 12.

-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직업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이러한 방향에서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은 소량 특성화인력 양성체제, 다원화된 운영체제, 근로자·성인의 재교육을 위한 기초직업교육의 역할 강조

I. 비전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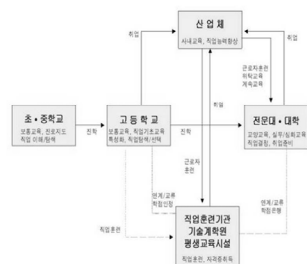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II. 혁신 방향

-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이 개발되도록 직업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구축

<학교-산업체-학교 열린 직업교육체제>



- 4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혁신

-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의 대폭 확대
 - 지자체(광역·기초)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 산업체 및 직능단체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 각 정부부처에 의한 실업고 특성화
 - 농어촌실업고를 '지역중합문화센터'로 육성
- 일반 실업고의 기초직업교육 내실화
 - 일반 실업고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
 - 필요한 통합형고의 유지 발전
 - 일반 실업고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도입
 - 실업고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 단위학교 중심의 변화와 혁신 지원
 - 특성화고 및 희망하는 실업고의 자율학교 지정
 - 학교 커설팅 활성화
 - 직업교육 최고경영자과정 설치·운영 지원
 - 교원수급의 유연성 제고
- 산업사회 수요 예측에 근거한 실업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 일반고의 교양직업교육 강화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

제5차 국가고용전략위원회
제3호. 안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 5. 12.

관계부처 합동

II.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 추진방향

- ◇ 전체 전문계고를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
- ◇ 산업계·정부부처 공동으로 “선취업 후진학” 여건조성

□ 중점과제

1. 전문계고 재구조화
 - ① 마이스터고(40개교)를 통한 취업 선도모델 정착
 - ②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확대(240개교)
 - ③ 종합고 등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201개교)

< 전문계고 재구조화 >

< 현 행 > 2010년 691개교 마이스터고(40개교) 특수목적고(40개교) (일반계고 또는 특성화고로 지정가능) 특성화고(240개교) (일반계고 또는 고교특성화고) (일반계고로 전환(201개교))	< 개 편 > 2015년 400개교 * 마이스터고 50개교 * 특성화고 350개교 일반계고 등 291개
--	---

2. 재구조화 지원방안

- 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② 선취업 후진학 체계 구축
- ③ 재정지원 및 평가·관리제도 마련

현재의 실용정부(MB정부)에서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은 ‘선취업-후진학’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무엇보다 고교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 것임.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난 정부에서의 고교 직업교육을 통해 높은 대학진학률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중소기업에 중심을 둔 인력 부족현상의 심화문제를 주된 근거로 두고 있음.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1999년 이후 고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주요 변화

정부	정책 방향	정책 내용	추진 정책	추진 주체
국민의 정부 (1998~2002)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실업계 고교 교육의 중국교육 탈피로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도록 체제 전환 및 정책적 지원 강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중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방향(1999)	교육부
			제1차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1999)	교육부, 노동부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2000)	교육부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	교육인적자원부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2003~2007)	열린 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일·학습·삶이 하나 되는 교육	• 직업교육체제 혁신 • 직업교육 내실화 및 진로 지도와 취업지도 강화 •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구축 •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 개발 기회 확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 중 평생학습을 위한 학교단계 직업교육 혁신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 중 학교·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교육인적자원부
실용정부 (2008~2012)	전문계고를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선취업 후 진학 체제 구축	• 전문계고 체제개편 •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지원 및 교육비 지원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와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 • 고졸 취업문화 정착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2007)	교육인적자원부
			100대 국정 과제 중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2008) :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2008.7)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	국가고용전략회의
			교육희망사다리 구축(2010)	국민경제대체회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2011)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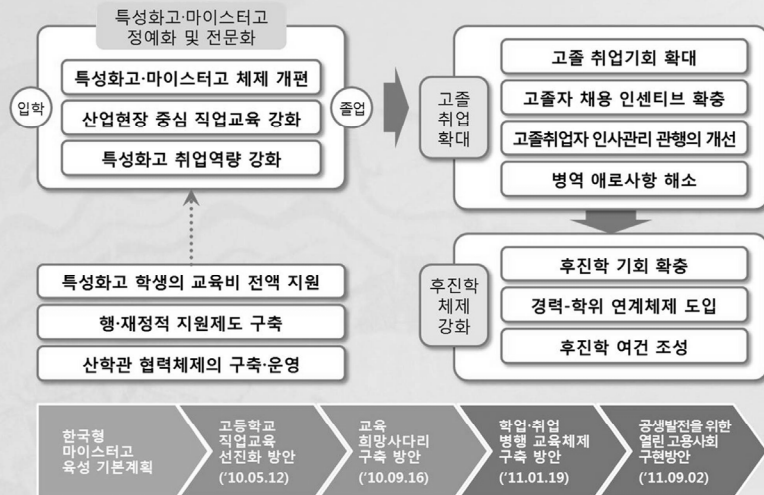
1.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동향

1990년대 이후 고교 직업교육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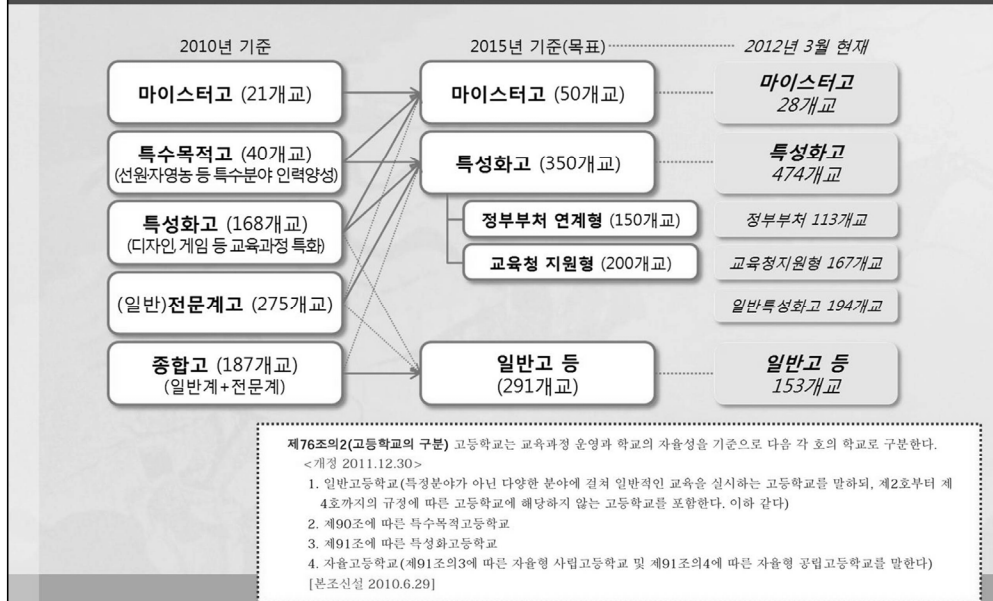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관련 주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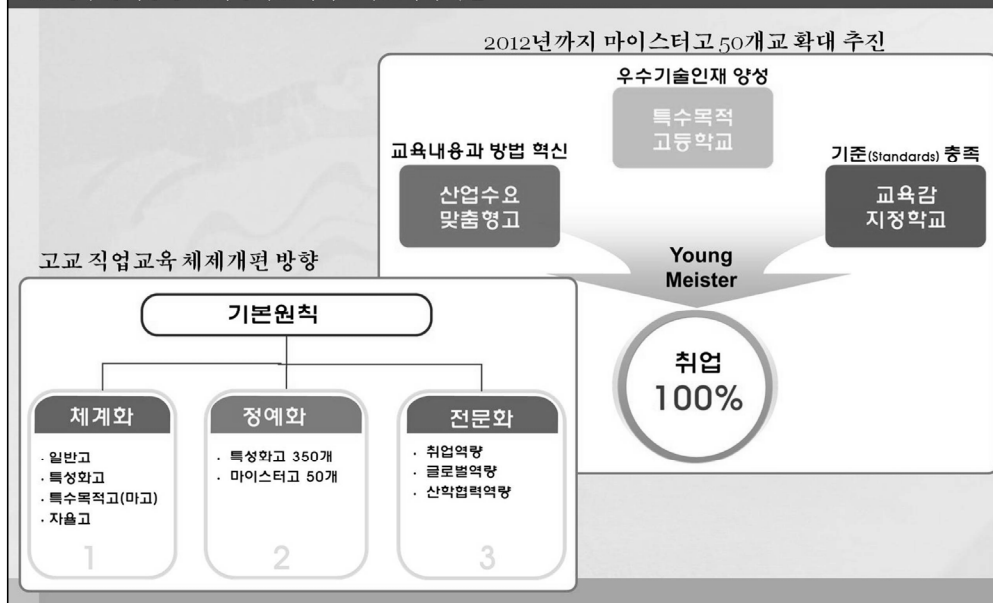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정책동향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체제 개편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정책동향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체제 개편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 정책동향 #2. 산업현장중심 직업교육강화-직업기초능력평가도입

도입배경 :

- 특성화고에서 직업기초교육 활성화에 대한 요구
- 일반고와 특성화고 구분 없이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직업기초능력 평가로 대체하자는 학교 현장 의견 존재

도입방향 :

- 중등직업교육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성취도 평가 도입
-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본역량이 있음을 산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호기제로 활용
- 평생학습의 기본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정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지원과 연계
- 수능 직업탐구영역의 시험과목 및 범위를 직업기초능력 평가 내용과 연계

평가체계 :

직업기초능력	직장적응능력군	직무능력영역	⇔	산업체 요구 반영
	업무처리능력군	문제해결영역		계열별 전공필수 고려
기초학력	기초능력군	의사소통영역, 수리활용영역	⇔	학업성취도평가 대체
	국, 영, 수 (평생학습 기본역량)			기초학력 보장 지원

※ 기초능력군, 업무처리능력군 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 직장적응능력군 평가는 2015년부터 시행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 정책동향 #2. 산업현장중심 직업교육강화-산업수요맞춤형 전문기술교육강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

- 수업혁신 지원
- 산업체 우수강사
- 산학협력 인턴교사
- 창의경영학교(학력향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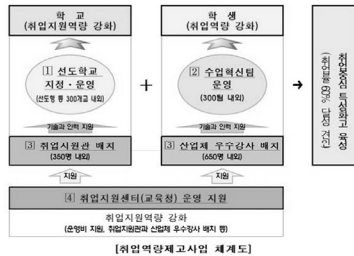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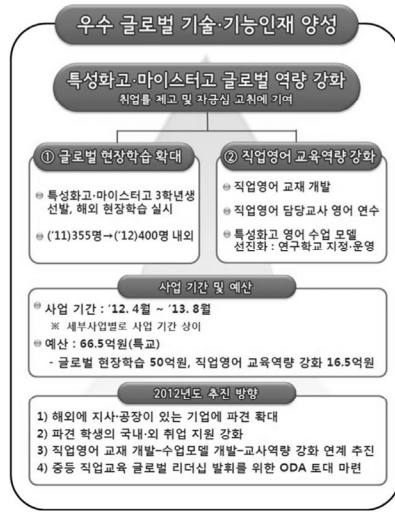
MB정부 정책동향 #3.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 2012년도 취업역량제고 사업 기본계획

총 사업비: 468억원('11년 대비 190억원 증액)		
사업명 및 목적	주요 내용	예산
(1) 취업가능 강화 (교육)	▶ 학교 양형화(신도형, 역량강화형 등) 지원(220억원) - 취업시도형 활성화,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지원, 취업처 발굴, 우수시도제제 주축(역량 추진) 등 수행 ▶ 성과관리(우수, 중보, 적당 시범 등)(80.5억원)	118.5억원 (시도 대응 100% 별도)
(2) 취업역량 수업 선택권 강화	▶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수지역을 발굴, 일반화를 지원(선진화 연구대학, 0.5억원) ▶ 취업지원 정보인력(취업지원관) 350명 지원으로 특성화고 취업지원, 직업 감회(교육) 등 지원(약)	10.5억원 (시도 대응 5% 별도)
(3) 전문영역 지원 (교육)	▶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의 기술을 학교현장에 전수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인력(산업체 우수 교사) 650명 지원('11년 대비 300명 증원)	331억원
(4) 취업지원 센터 지원 (교육)	▶ 10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8억원



• 2012년도 특성화고 글로벌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 정책동향 #4. 고졸취업 확대

• 공공 부문 고졸 적합 일자리 발굴

- 기능인재(기능직 9급) 추천채용 규모 지속적 확대
- 직무분석 등을 통해 고졸 출신에 적합한 직무분야 발굴
- 고졸 적합한 직무 지속 발굴 및 제도관행 정비
- 채용시험에서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과목(외국어, 법률)을 배제하고 직무능력평가 실시

• 직무능력 중심 채용관행 확산

- (공무원) 기능기술직 채용시 인턴근무를 통한 선발 방식을 도입확대하고, 향후 일반직까지 적용
- 중소기업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공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한 근무경력자에 대해 우대방안(가점부여 등) 시험 실시
- (민간기업) 자발적 능력 중심 채용관행 확산

• 고졸 취업자 인사관리 관행 개선

- 임금체계: 직무성과급 확산
- 승진제도: 능력중심 열린 승진제 정착

• 병역 관련 애로사항 해소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13년)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기한 연장('12년 → '15년)
-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만 24세) 시행
- 기술습득·군복무·취업이 연계되도록 기술병 선발 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우대 추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군 전역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표 III-12〉 2012년도 고졸 채용 계획

분야별	기관	채용 예정 인원	자료 출처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국가직 공무원)	204명 (일반직) 104명 (기능직) 100명	'12년 행정안전부 지역인재 9급 및 기능인재 전문직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	211명 (일반직) 201명 (기능직) 10명	'12년 지방자치단체 특성화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	8개 교육청	34명 (일반직) 34명	'12년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공공기관	288개 공공기관	2,508명	기획재정부
대기업	12개 기업	34,320명	연론 보도
은행권	17개 은행	1,050명	연론 보도
계		38,327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특성화고 취업육진팀(2012), 2012년도 고졸 채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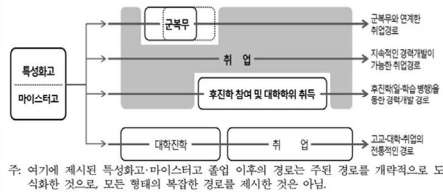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 정책동향 #5. 후진학기회확충및 여건조성

• '후진학'의 의미

- '재직경험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일(취업)과 학습의 병행(「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105)」),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후진학 생태계(메니투데이, 2011.12.30), '먼저 취업하고 재직 기간 필요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한국경제, 2012.5.15)' 등의 의미로 사용
- → 고교 졸업 후 재직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학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습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성화고-대학진학 경로의 지나친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대안적인 경로의 의미

<특성화고졸 진로경로와 후진학 경로>



• 후진학의 공급

<주요 후진학 제도별 개요 및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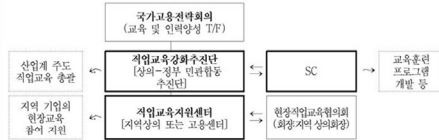
구분	개요	학위	모집인원
제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후 3년이상 산업체 재직자가 정원외 입학	전문학사 학사	65교 4,300명 (13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전공심화 과정	전문대학에서 관련 산업체 경력으로 1년 또는 2년의 심화과정 운영으로 학사학위 취득	학사 (전문대)	91교 5,608명 (12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장이 소속 직원을 위해 교육과정 개설 위탁 운영	전문학사 산업학사	73교 12,130명 (12학년도 등록인원 기준)
방송 통신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	학사 석사	1교 60,580명 (13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사이버 대학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 직접 학교 운영(고등교육기관)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21교 34,340명 (13학년도 입학정원 기준)
계약학과	산업체장이 소속 직원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 위탁·운영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105교 12,274명 (12학년도 등록인원 기준)
기술대학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 직접 학교 운영(고등교육기관)	전문학사 학사	1교 100명 (12학년도 모집인원 기준)
사내대학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 직접 학교 운영(평생교육시설)	전문학사 학사	7교 355명
기업대학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의 교육을 위해 직접 설립·운영(비학위과정)	-	4교 540명 (13학년도 모집정원 기준)
합계			368교 130,263명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 정책동향 #6. 산학관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산업계 주도의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 구축

- 현장교육 관련 정책결정 및 의사 조정기구로 '국가 고용전략회의와 교육 및 인력양성 T/F'를 활용하고, 현장 직업교육 실행을 주관하는 기구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간 합동 '직업교육강화추진단' 설치



[그림 III-19] 현장 직업교육 강화 관리체제(안)

출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1),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 기업과 학교·학생간 현장교육 중개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별 직업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지역상의(또는 고용센터)를 활용

- 지역상의가 중심이 되는 "현장직업교육협의회"를 설치, 직업교육지원센터 활동을 지원
- 퇴직 CEO 등을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로 임명하여 산업체와 학교 간의 연계 역할 임무 부여

•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위원회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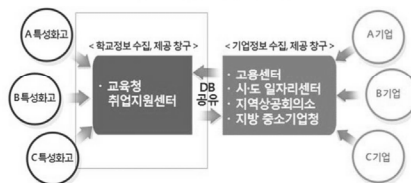
- 교수 등 이른 중심 전문가 위주인 정부위원회의 위원에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

• 전국적 취업 네트워크 구축

• 주요기업-정부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및 고교현장실습 교육참여를 위한 협약체결 확산

- 「1社 1校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
- 정부와 산업계간 직업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화 채널 마련

< 학교-기업 매칭시스템 >



2. MB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 동향

MB정부 정책동향 -성과 및 한계

• MB 정부 고교 직업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취업-후진학” 또는 “고졸 취업 문화 확산”

-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산업수요 기반 직업교육 운영→산학협력의 강화→양질의 고졸 인력 양성→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구축”에서의 일정한 성과 도출
 -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자율형 사립고 10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
- 특성화고에서의 취업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추진
 - * 취업지원관, 우수기능장사 등 산업계 인사 활용 기회 확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산학협력 연계 강화 등
- 고졸 취업 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 운영

• 한계

- 전체 교육시스템 안에서 고교 직업교육 경로의 “정체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
 - * “후진학”을 통해 대안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교육경로로 정착되고 있는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여전히 학교 기반 직업교육(school-based VET)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 기반 직업교육(work-based VET)은 미약한 수준
- 고졸 취업 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졸 취업자의 산업현장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 * 양질의 일자리 지원, 지속적인 경력개발 실현, 남학생의 군복무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등은 여전히 분석되어야 할 이슈임

3. 현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

국정과제 & 교육부업무계획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가. 과제개요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경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 ① (범부처 지원) 산업정책·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 지자체, 산업계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
- ② (마이스터고 다양화) 국가·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③ (현장중심 교육 운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④ (직업교육 기회 확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입학 시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중점 반영한 선발 제도를 확대,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취학 확대·다양화 추진 등
- ⑤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비유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
 - * 성안근로자 중심 학사운영개선(학업교류, 유연학기제 등), 재직형제의 학업 인정, 후진학 장학금 지원 등

②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국정과제 73)

□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고교 직업교육 체계 강화

- 「NCS 개발 및 활용 계획」과 연계하여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14년까지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지역 전략산업 등 기술명장 육성에 분야별 발간하여, 마이스터고 8차 지정 계획 수립 시 반영(13.5~12)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계와 연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력 필요 분야를 발굴(13.6)하고,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13.5)하고, '14학년도부터 선발 확대
 - * 자격 소지, 취업의지 등을 반영한 별도 전형으로 일부 시·도와 학교에서 개별 시행
-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위탁과정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13.6)

□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계속교육 시스템 강화

- 선취업 후진학 과정 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13.5)
 - 재직자특별전형 선발을 확대·내실화하고, 전국적으로 산재된 소수의 후진학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대표 대학을 지정·운영
 - * '13년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험 실시(농업, 해양분야 등)
- 고졸 취업자에게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사·학사(국내)→석·박사(국외)로 연계되는 국비유학생 선발계획 수립(13.6)
 - * 재직수업(2년) →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을 → 고시(하반기) → 선발(14년)

3. 현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

국정과제 & 교육부업무계획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가. 과제개요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 [1]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일장장제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및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한 취업 지원**
 - 공공기관 중심으로 선도,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확산
- [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협업체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13 ~ '14년)**
 -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강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직업자격체계(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구축
- [3]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신규채용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보급**
- [4]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및 재직근로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 기반 조성**
 - 생애주기별 숙련향상 지원 및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1:1 멘토링 등에 기반한 「숙련신단-맞춤형 직업능력개발-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추진체계 구축
 - 중앙-광역별 인력숙련수요 전망을 토대로 인력수요를 파악 하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합지원

11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국정과제111-2)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도출하여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 교육·훈련과정을 일자리증심으로 개편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해 '14년까지 모든 직무분야의 표준 개발
 - 산업인력관리공단·직업능력개발원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단」을 설치하여 20여개 Working Group(Sector Council·학계 전문가 등 구성) 중심으로 부문별 표준개발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편 추진
 - NCS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설계, 평가, 자격신설 등을 일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매뉴얼」 개발('13.7)
 -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체 협의체와 협력하여 시범 학교를 지정·운영한 후 확대('13.9)
 - (4년제 대학) NCS 기반으로 교육(취업)중심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유도
 - 공학기술교육혁신을 등 각종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
- 학교교육, 평생교육, 직장교육, 학점인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기본계획 수립('13.9)
 - NQF에 기초해서 직장교육, 평생교육 등을 학점으로 전환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13.12)
 - NQF에서 제시된 직무역량수준을 토대로 국가 또는 민간자격의 활용 정비하는 방안 마련('13.12)
 - NQF: 다양한 능력지표(학력, 경력, 자격 등)간에 상호 동등하게 평가 인정될 수 있게 하는 직무역량 수준체계

3. 현 정부의 고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

국정과제 & 교육부업무계획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가. 과제개요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 [1]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일장장제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및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한 취업 지원**
 - 공공기관 중심으로 선도,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확산
- [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협업체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13 ~ '14년)**
 -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강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 직업자격체계(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구축
- [3]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신규채용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보급**
- [4]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및 재직근로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 기반 조성**
 - 생애주기별 숙련향상 지원 및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1:1 멘토링 등에 기반한 「숙련신단-맞춤형 직업능력개발-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추진체계 구축
 - 중앙-광역별 인력숙련수요 전망을 토대로 인력수요를 파악 하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합지원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자격정책심의회의 내에 「(가칭)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3.4)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운영 활용 방안, 국가역량체계(NQF)도입 등 심의
 - 교육부 차관 고령우 차관 공동위원장은 관련부처 국장, 단장, 전문연구기관, 교육계 및 산업계 참여

□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 제도 도입

-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제대로 평가받아 별도의 검정 없이 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13.9)
 - 제도 도입을 위해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추진('13.4~9)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한 특성화고, 국립 마이스티고, 전문대학에 우선 적용(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고용부), 국가공인 민간자격(교육부)
- 과정이수형 자격 관리·운영체계 및 로드맵 수립('13.12)
 - 능력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재 채용과 급여, 승진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격-교육훈련의 선순환 체계 마련

□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안착

- 교육부 소관 분야에서 직무능력평가제 시범운영 방안 마련('13.12)
 -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 직원 채용 및 승진 시 시범 도입
 - 교원 직무능력표준 등 교육분야 국가 직무능력표준 개발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개발된 직무별 요구역량에 기초한 민간분야의 채용 시스템 설계 및 시범운영('13.9)
 - 2~3개 직업·직무분야를 선정하여 직무별 요구역량을 도출하고 채용기준을 개발·보급하고 활용을 유도('13.8)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교육단계

인 쇄 2013년 7월 22일

발 행 2013년 7월 2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